

# “전라감영 복원으로 도민 기상 우뚝 서길”

### 송하진 도지사, 전라감영 복원 대장정 소감

2009년 당시 전주시장 시절부터 땀과 열 수 없는 인연으로

“복원 위해 치열했던 사회적 합의 과정도 뜻깊어 호남의 문화중심지 전복 위상 회복 계기로”



전주시장인 송하진 도지사가 논의를 본격화해 2009년 전라감영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2014년에는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송 지사는 20여 년에 달하는 전라감영 복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추진한 장본인 중 하나다.

2001년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전북도청사 이전 논의의 출발에 관여했고 전주시장으로 임하면서는 전면에 나서 사업을 직접 이끌었다.

“전라감영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전신인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도민들이 참여 복원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 것도 송 지사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복원이 무사히 이뤄져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원추진위원회에 일을 위임하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전라감영을 전복인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으로 복원하는 정도(正道)라고 판단해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감영 복원을 두고 해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함께 노력했던 모든 사회적 합의 과정 역시 전라감영이 전복 사회에 선사한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라감영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송 지사는 “한옥마을부터 풍납문, 풍패지관까지 이어지는 전통문화 유산지구의 한 축으로서 구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재창조라는 의미에 맞게 감영의 의미와 정신은 지키면서도 현대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지사는 “전라감영 복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전라감영 복원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였던 전복의 위상을 회복하고 전복 자존의 시대를 우리의 힘으로 열어나가지”라며 도민들에게 당부의 뜻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전라감영 복원을 계기로 전복인의 기상이 우뚝 서길 바랍니다”역사적인 전라감영 복원 기념식 현장에서 만난 송하진 지사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전라감영 복원으로 호남제일도시의 자긍심을 다시금 우뚝 세우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시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다스리던 전라감영의 소재지인 전복은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리 역사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복원된 전라감영이 전복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복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구심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와 전라감영은 땀과 열 수 없는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도청이 신도심으로 이전한 뒤 당시

##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II, 실제 공급은 2.8%밖에 안돼

### 민주 김윤덕 의원, “현실조건 파악 정책 내놓아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현황(8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이 전체 목표 1만5,200호 중 실적은 7,608호로 전체에 50%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을 나눠보면 신혼부부I 유형의 경우 목표 1만300호 중 실적 7,467호(72.5%)로 양호하나, 신혼부부II 유형은 목표 4,900호 중 실적은 141호로 목표 대비 실적이 2.8%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신혼부부가 처한 현실조건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신혼부부II 유형의 경우 소득기준, 혼인기간, 자녀나이 등을 완화해 제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신혼부부가 처한 현실조건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2020 국감, 현장 속으로

# “장점마을 사태, KT&G에 책임 크다”

### 민주 김수흥 의원, “연초박 비료공장에 공급” 질타

### “정부, 퇴비 사용 허용” 비판도… “국정조사 필요성” 강조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인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장점마을 암발병 사태에 정부와 KT&G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담배재배기를 퇴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정부의 비료공정규격으로 인해 발암물질이 장점마을을 덮치게 됐다”며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천물류창고 화재, 밀양요양병원 화재, 제천스포츠크터 화재 참사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이 있었다고 비교하며 장점마을에 무관심한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년 동안 생존을 위해 투쟁한 국민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마을에 방문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도 책임이 크다고 강력히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따르면 KT&G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20톤의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판매했으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앞에 걸려 생명을 잃어갔다.

김 의원은 가슴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어 판매자가 아닌 원인물질을 공급한 측에도 책임이 있으며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연초박의 경우 KT&G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KT&G는 연초박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

로 밝힌 경영방침에 따라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KT&G는 발암물질을 내뿜는 비료공장에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KT&G가 2007년 폐년 지속가능경영리포트에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 책임 방기에 무게가 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KT&G의 책임을 지직한 뒤 김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KT&G 백부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해 남은 국정기간 동안 장점마을의 진상 규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수흥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국감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장점마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진실규명이 완료돼야 하며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새마을금고 보이스포싱 피해 연평균 112억원

### 민주 한병도 의원 “금융사기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포싱)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포싱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보이스포싱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7,996명이었다.

누적 피해액은 450억 규모로, 연평균 112억원 이상의 금액이 사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었다.

이 기간동안 보이스포싱 사기에 악용된 대표통장 발급 건수는 1만8,145건으로, 연평균 4,500여개의 대표통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지난 한 해에만 5,867건으로 연평균을 넘어섰다.

피해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6%(2,92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171명, 60대 1,848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미만이 총 5명으로 나타나

아이들에게도 보이스포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포싱으로 인한 주요 피해를 살펴보면 금융기관·공공기관·지인 사칭으로 이뤄지는 사기수법이 대부분이었다.

사기범은 문자,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대출 진행비와 수수료 입금 유도를 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취할 경우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와 해킹으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 사칭으로 통화가 어렵다는 상황을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소액을 요청해 큰 의심 없이 송금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의원은 “새마을금고 역시 보이스포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표통장 근절 뿐만 아니라 보이스포싱 제로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 62%’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까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 중 161개소가 폐지됐다. 아직까지 전국 스쿨존 120개소에서 불법노상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의 경우 폐지대상 21개소 중 10개소가 폐지돼 가장 낮은 진행률

(47%)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기(48%), 대구(50%), 경북(50%), 경남(52%)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울산은 폐지 대상 주차장이 1개소에 불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행률이 0%로 집계됐다.

폐지대상 불법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80개소였으며 주차가능 면수는 1,372면에 달했다.

한 의원은 “폐지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